



##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황과 다자간 해양협력방안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질서가 새롭게 규정된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공통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해양자원 개발과 원거리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적극적 해양전략을 표방하고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각국간 해군력 현시 및 해양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동**아시아 해양질서상의 혼돈은 우리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불안요인을 던져준다. 한국 경제가 지탱하는 해양수송로의 안전에 차질이 생기고, 미일중러 등 주변국의 해양갈등 심화는 한반도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안정, 해양 관련 국가이익의 확보, 이를 수호하기 위한 적정 해군력의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동**아시아 해양질서 안정을 위해 기존의 양자간,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해양안보 협력 레짐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평화적 해양강국'의 기본이념하에 우리의 해군력 강화와 다양한 해양자산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평화적 해양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정비도 필요하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8. 3) 발표자료임.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동아시아 새로운 해양질서 전개와 갈등 발생 요인
  - 가. 동아시아 해양질서 내 각국간 갈등 발생의 배경
  - 나.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둘러싼 갈등 요인에 대해 다양한 시각 존재
3. 주요 국가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현황
  - 가.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 나.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 다.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 라.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 마. 여타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추세
4.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가능성
  - 가. 동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 나. 남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5. 동아시아 해양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
  - 가. 기본적 해양전략과 정책방향 정립
  - 나. 양자적 해양협력 강화
  - 다. 동아시아 다자적 해양협력 강화
  - 라. 해양자산, 해군력 강화

## 1. 문제의 제기

### 1) 동아시아 해양 정의

- 동아시아 대륙을 에워싼 오호츠크해, 동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그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서태평양 등의 해역

### 2) 해양분쟁 및 해양안보 정의

- 해양분쟁: 해양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 영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등의 경계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 또한 이 해역들에서의 자원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 관련국들의 해군력 증강과 해군력 시위로 해양수송로(sea lane)의 안전과 자유항행이 위협 받는 사태
- 해양안보: 이러한 분쟁 및 갈등요인들로부터 도서 영유권 등 국가 주권을 확보하고, 해양이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혹은 상태

### 3) 최근 동아시아 해양질서에서 도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이나 해저자원을 둘러싼 각국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남중국해 해역에서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관련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갈등
- 동중국해 해역에서 센카쿠(중국명 釣魚島) 영유권 관련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 동해-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 러시아와 일본 간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싼 반환 논쟁

### 4) 이러한 해역에서 중국이 현상질서에 도전하는 양상 노정

- 이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지원하거나 해양항행의 자유를 거론

### 5) 한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격화는 결코 바람직스런 상황이 아님

-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및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원 확보가 중요
-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대부분을 동아시아 역내의 해양수송로에 의존
- 한국으로서는 각국간 해양분쟁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 보다 평화로

은 동아시아 해양질서 구축이 큰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선결조건

6) 본고의 문제제기

-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발생요인 분석
- 각국의 적극적 해양전략 추진과 해군력 증강 및 해양자산 확보 현황
-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안정과 해양이익 확보를 위한 한국 해양전략 및 해군건설 방향

## 2. 동아시아 새로운 해양질서 전개와 갈등 발생 요인

### 가. 동아시아 해양질서 내 각국간 갈등 발생의 배경

-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공포 이후 새로운 해양질서 전개
  -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350해리 이내 대륙붕 질서 대두
  - 동아시아 해양의 경우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관할구역 중첩
  - 경계 책정 과정에서 갈등 발생, 도서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 격화<sup>1)</sup>
- 냉전체제하에는 이념을 달리하는 체제간 대립이 오히려 국가 상호간 영유권 분쟁의 격화를 방지하는 역할
  - 냉전체제 해체 이후 이념 대립이 아닌 각국간 경제이익, 국가이익 대립이 보다 첨예하게 전개
  - 해양이익과 해양주권에 대한 관심 고조
-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들이 경제성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력 경쟁적 증강
  - 해군력 증강은 보다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의 배경이 됨
  - 국가간 해양전략의 충돌과 해양분쟁 증대

*최근 동아시아  
해양질서에서 도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이나  
해저자원을 둘러싼  
각국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나.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둘러싼 갈등 요인에 대해 다양한 시각 존재

- 자유주의적 제도론자들은 유엔해양법질서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간 규범에 대한 통일된 해석 부재, 지역 내 해양레짐의 부재를 분쟁요인으로 지적

**최근 동아시아****해양질서의 변화는****중국의 급속한****국력성장과 이에 따른****중국의 적극적****해양전략, 해양전력****증강이 주요인이 되고****있음**

- 구성주의자들은 동 지역 내 개별 국가간 공동체 인식의 결여, 냉전체제하 이념 대립 구조는 붕괴되었으나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아이덴티티 형성 결여 등을 지적
- 본고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접근, 각국의 국력성장에 따른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해양전력 증강이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음<sup>2)</sup>

**3. 주요 국가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현황****가.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 1) 최근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변화는 중국의 급속한 국력성장과 이에 따른 적극적 해양전략, 해양전력 증강이 주요인이 되고 있음
  - 마오쩌둥의 시대, 중국 해양전략은 지상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에 국한, 연안해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
  - 1980년대 중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중국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중국 해양전략 및 해군력 증강의 양상에 변화 발생
- 2)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해양전략 및 해군전략의 적극화
  - 1986년 당시 유화청(劉華清) 해군 제독의 제1도련, 제2도련 개념 제시
    - 제1도련(島連, island chain)은 중국 해군의 작전반경으로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
    - 제2도련은 장차 해군력이 발전하게 되면 확대되어야 할 작전해역
    - 이에 따라 종전에 표방해온 연안방어전략에서 탈피하여 제1도련 해역 내에서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근해방어(Near Sea Defense 또는 Offshore Defense) 해군전략으로 전환<sup>3)</sup>
  - 근해방어전략 표명 이후 90년대 중반에 루하이(旅海)급 구축함 개발, 97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이 신규 도입<sup>4)</sup>
    - 프리게이트함으로서는 90년대 이후 추가로 장웨이(江衛)급 개발
    - 잠수함 전력으로서 기존 로미오급, 명(明)급, 원자력잠수함(SSN) 한(漢)급에 더해 80년대에 샤(夏)급 전략미사일 잠수함(SSBN), 90년대에 송(宋)급 잠수함 배치, 러시아로부터 4척의 킬로급 잠수함 도입<sup>5)</sup>

3) 2000년대 이후 중국 원해방어 해양전략 변화

- 2000년대 중반 이후 근해방어전략을 넘어선 원해방어(Far Sea Defense) 전략론 대두<sup>6)</sup>
  -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7년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근해(近海)종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서서히 원해(遠海)방위형으로 전환하여 원해기동작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지시<sup>7)</sup>
  - 2011년에 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 2010』은 해군의 근해방어전략 임무를 재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해에서의 작전능력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sup>8)</sup>
  - 중국 해군전략가들은 현재 중국 해군력 수준이 선진국가에 비해 낙후되었으며, 전력 증강 및 작전반경 확대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sup>9)</sup>
  
-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전력 증강 현황
  -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6년 이후 루조우급 및 루양급 구축함을 보유, 장카이급 호위함도 전력화<sup>10)</sup>
  - 2000년대 이후 잠수함 전력의 증강 괄목
    - 2004년 위안(元)급 잠수함 및 상(商)급 원자력 잠수함 진수
    -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원자력잠수함(SSBN) 진(晋)급 잠수함도 진수<sup>11)</sup>
  -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항모를 개조하여, 항모 스타로 탈바꿈
  
-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 활동반경 확대
  - 중국 해군 함정들은 제1도련선에 해당하는 오키나와와 미야코 사이의 공해, 혹은 제2도련에 해당하는 남중국해와 필리핀선을 잇는 해역을 넘어 서태평양상에 전개하여 수시로 군사훈련
  - 북한으로부터 청진항 부두 사용권을 받아내었고, 2011년 8월에는 해군 함정들이 원산항을 친선 방문<sup>12)</sup>
  -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등과 협정을 맺어 이들 국가들의 해군 기지 건설을 담당<sup>13)</sup>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7년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근해(近海)종합작전능  
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서서히  
원해(遠海)방위형으로  
전환하여 원해기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지시**

중국은 2000년대 이후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있음 특히 잠수함 전력의 증강은 괄목할 만함

〈표 1〉 2000년대 중국의 해군전력 보유 현황<sup>14)</sup>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구축함 (DD)	루다 I	13	13	13	12	12	12	11	10	10	10
	루다II	2	2	2	2	1	1	1			
	루다III	1	1	1	2	4	4	4	4	4	4
	루후	2	2	2	2	2	2	2	2	2	2
	소브레메니	2	2	2	2	2	3	3	4	4	4
	루하이	1	1	1	1	1	1	1	1	1	1
	루조우						1	1	1	2	2
	루양						2	2	2	2	2
	루양II						2	2	2	2	2
호위함 (FF)	장후 I	27	27	27	27	27	27	27	19	12	12
	장후II	1	1	1	1	1	1	1	1	7	7
	장후III	2	2	2	2	2	2	2	2	3	3
	장후IV	1	1	1	1	1	1	1	1	1	1
	장후V								6	6	6
	장카이 I						2	2	2	2	2
	장카이II									4	6
	장웨이 I	4	4	4	4	4	4	4	4	4	4
	장웨이II	7	8	8	8	8	10	10	10	10	10
잠수함 (SS)	한	5	5	5	4	4	4	4	4	4	3
	로미오 (개량형, SSG)	1	1	1	1	1	1	1	1		
	로미오	31	31	21	21	21	15	7	7		
	명(명)	20	21	22	20	20	20	19	19	19	19
	킬로	4	4	4	4	5	9	12	12	12	12
	송	2	3	3	8	9	10	13	13	13	13
	원(위안)					1	1	1	1	2	4
	상(상)							1	2	2	2
총합	126	129	120	122	126	135	132	130	128	131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01-2010; Jane's Fighting Ships 2001-2010. 참고하여 재구성.

**나.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1) 태평양전쟁 승전 이후 미국의 태평양 방면 전략 기초, ‘태평양의 내해화’**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 지역 해군력 철수에 대한 반성
- 태평양 지역 병력의 전진배치 태세 구축, 제3함대와 제7함대로 구성된 태평양함대 전력 유지<sup>15)</sup>

**2)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해양에서의 영향권 확대 움직임을 미국은 반접근 지역 거부(anti 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으로 파악<sup>16)</sup>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추구**

**3) 21세기 이라크-아프간 전쟁 종전 이후 태평양 해역에서의 Air-Sea Battle 전략 추진**

-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를 ‘반접근 지역 거부(Anti-Access Area Denial)’의 전략으로 파악
- 이에 대응한 ‘공해전투(Air-Sea Battle)’ 및 JOAC(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개념 발전
  - ‘공해전투’의 개념은 2009년 9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주도로 제리 러프헤드 미 해군참모총장과 노튼 슈워츠 미 공군참모총장 등이 회합을 갖고 개발한 합동작전의 개념<sup>17)</sup>
  - 최근에는 국방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 JOAC 개념하에 미 공군과 해군 간에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작전 개념<sup>18)</sup>
  -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대요인을 격퇴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세력 투사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되는 군사력, 특히 해양 및 항공의 전투력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
  - ‘공해전투’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 및 전자전 능력, 전방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해공군 전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공체제 및 미사일 방어능력, 적대세력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적 중심타격 능력, 그리고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밀접한 연합작전 능력 필요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를 ‘반접근 지역 거부(Anti-Access Area Denial)’의 전략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추구**

**미국은 국방비 삭감  
추세 속에서도  
태평양사령부 관할  
지역의 전력을  
증강하거나,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지원태세 강화**

**4)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력 증강 및 동맹국과의 연합작전태세 강화의 현상은, JOAC 또는 Air Sea Battle 개념의 구현으로 해석됨**

-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제3함대(샌디에이고)와 제7함대(요코스카)로 구성되고, 보유전력은 6개 항모전투단, 함정 90여 척, 잠수함 41척<sup>19)</sup>
- 국방비 삭감 추세 속에서도 미국은 태평양사령부 관할 지역의 전력을 증강하거나, 호주·싱가포르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지원태세 강화
  - 2009년 5월 당시 B-52 전략폭격기 8대, F-15 전투기 18대 등이 배치되었던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현재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 차세대 공중급유기 12대, 전략폭격기 6대, F-22와 F-35 등 제5세대 전투기 48대 추가 배치<sup>20)</sup>
  - 2012년에 호주 북부의 다윈 기지에 미 해병대 250인을 우선 배치 추진, 최종적으로 2,500인 해병대 병력 배치 계획<sup>21)</sup>
  - 싱가포르에 최신 연안전투함 주둔 추진, 필리핀과 태국 등에도 대잠 초계기 배치 확대 추진<sup>22)</sup>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신형 무기 배치
  - 항공모함에서 발진되는 무인항공기 개발 추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점 배치 추진<sup>23)</sup>
  - 오키나와 미 해병기지에 신형 수직 이착륙 전투기 오스프리 배치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각적 연합군사훈련 실시
  - 한국과 연례적으로 키 리졸브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 일본과도 매년 공동통합 지휘소훈련(CPX) 및 실병력 투입 연합훈련 실시<sup>24)</sup>
  - 태국과는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 필리핀과 발리카탄 연합군사훈련 실시<sup>25)</sup>
  - 2009년, 인도 및 일본과 일본 서측 해역에서 말라바 해상훈련 실시
  - 2011년 7월, 일본 및 호주와 함께 브루나이 해상에서 연합해군훈련 실시
  - 2011년 7월 15일, 베트남과 함께 다낭 해상에서 연합해군훈련 실시<sup>26)</sup>

**다.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1) 전수방위 원칙하의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

- 국가정책수단으로서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평화헌법’하에서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 원칙’,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 등을 표방해옴
  -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해병대 및 항모 미보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전력은 세계 정상급 전력으로 평가됨
  - 주요 수상함정 숫자와 총 배수량 측면에서는 세계 3위권이고, 함대 방공능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권이라고 평가
  - 전체적으로는 해상자위대는 미국에 이어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sup>27)</sup>

**2) 최근 일본은 평화헌법하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군사규범, 안보 규범을 변화시키고 있음**

- 2010년 12월,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통해 종전의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갖겠다는 ‘기본적 방위력(Basic Defense Force)’ 개념을 폐기하고, 새롭게 ‘동적방위력’ 개념 표방
  - 동적 방위력 개념은 평화시의 억제, 유사시의 대처, 그리고 테러리스트 공격과 같은 grey zone의 위협에 대응하여 자위대에 정찰 및 감시전력, 정밀타격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는 개념<sup>28)</sup>
- 이외에도 2008년 우주기본법 성립에 따라 종전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폐기, 군사적 목적의 우주개발 허용
  - 2011년 12월에는 종전의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미국 및 나토 국가들과의 공동개발 및 수출을 가능하도록 함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전력은 세계  
정상급 전력으로 평가됨**

3) 이러한 전력증강 개념 및 안보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최근 일본도 <표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해상자위대 전력의 증강을 도모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은 이지스함,  
헬기탐재호위함 등  
전력 증강

<표 2> 2000년대 일본의 해군전력 보유 현황<sup>29)</sup>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구축함 (DD)	하타카제	2	2	2	2	2	2	2	2	2
	다키카제	3	3	3	3	3	3	2	1	1
	다카나미			2	4	4	5	5	5	5
	콩고	4	4	4	4	4	4	4	4	4
	아타고							1	2	2
	무라사메	7	9	9	9	9	9	9	9	9
	시라네	2	2	2	2	2	2	2	2	2
	하루나	2	2	2	2	2	2	2	2	2
	아사기리	8	8	8	6	6	6	6	6	6
	하스유키	11	11	11	11	11	11	11	11	11
	다카스키	2	2	1	1					
야마구모	1	1	1	1	1	1				
호위함 (FF)	유바리	2	2	2	2	2	2	2	2	2
	이시카리	1	1	1	1	1	1	1		
	치쿠고	3	1							
잠수함 (SS)	아부쿠마	6	6	6	6	6	6	6	6	6
	하루시오	7	7	7	7	7	7	7	7	7
	유우시오	6	6	5	4	3	1	1		
	오야시오	4	5	6	7	8	9	10	11	11
	소류								1	1
총합	71	72	72	72	71	71	71	71	71	71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1-2010; Jane's Information Group, *Jane's Fighting Ships* 2001-2010. 김종형, 논문 등 참고하여 재구성.

-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은 이지스함, 헬기탐재호위함 등 전력 증강
  - 배수량 7,700톤급 아타고급 이지스함 2척을 신규 보유하면서,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 태세 구축
  - 휴가와 이세 등 배수량 1만3,500톤급의 헬기탐재호위함(DDH) 2척을 취역시켰고, 향후에도 1만9천톤급의 DDH 2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sup>30)</sup>

- 구형 유우시오급 잠수함이 도태되고, 신형 오야시오급 잠수함이 증가
- 『방위계획대강 2010』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2척 잠수함 태세 계획
- 기존 보유 80여 기의 대잠 초계기 P-3기를 대체할 독자적 대잠초계기 개발

#### 4) 해상자위대 활동반경 확대

- 미국의 이라크전쟁 및 아프간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양 해역에 파견되어 급유활동을 실시
- 2009년 이후 소말리아 해역에 함정 2척을 교대로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
- 미국 및 호주와의 연합해군훈련, 미국 및 인도와의 연합해군훈련도 실시
  -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확대도 요청<sup>31)</sup>

### 라.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 1) 탈냉전기 직후 러시아 해군의 약화

- 냉전기 소련 해군은 고르쉬코프 제독의 비전에 따라 대양해군으로 성장, 미국 해군에 필적하는 능력 보유<sup>32)</sup>
- 탈냉전기 이후 경제난 속에 러시아 해군은 전성기 구소련 해군의 1/4 수준으로 전력 감소<sup>33)</sup>

#### 2) 경제성장 바탕으로 적극적 해군정책 전환

- 푸틴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거치면서 러시아 경제 회복, 강국 부활 비전 제시
- 2010년 러시아 국방성이 교통성과 공동으로 국가해양정책(National Maritime Policy) 발간
  - 자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세계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 해군의 역할은 역제를 통한 주권 보호, 나아가 해군의 평화유지활동, 인도주의적 임무, 자원 탐사, 해양의 자원확보 활동도 활발하게 실시한다는 방침
  - 북극해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과 대륙붕에 대한 접근능력 강조

**탈냉전기 이후 러시아 해군은 전성기 구소련 해군의 1/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적극적 해군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최근 푸틴 대통령은  
2020년까지 러시아  
해군이 전함 51척,  
핵잠수함 24척 체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

- 태평양 해역 쿠릴 열도 연안 항구에 대한 인프라 발전을 역점 사업으로 강조<sup>34)</sup>

### 3) 해군전력 증강 계획과 병행

-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태평양과 북해 지역의 해상작전을 위해 항공모함 5~6척의 건조 계획 발표
- 신형 잠수함이나 구축함 획득에도 적극적
  - 2007년 2,100톤급 호위함 스테레그쉬취(Steregushchiy) 진수, 향후에도 동급 호위함을 10~20척 건조 계획
  - 2009년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유리 돌고루키(Yuri Dolgorykiy)를 취역시켰으며, 2017년까지 동급 잠수함을 8척 추가 건조 계획, 배수량 2만4천톤에 달하고,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블라바를 12기 탑재할 수 있는 유리 돌고루키는 2011년 태평양함대에 배치<sup>35)</sup>
  - 2010년에는 핵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SSGN) 세베로드빈스크(Severodvinsk) 취역, 향후 동급 잠수함 10척 추가 건조 계획
  - 고르쉬코프급 4,000톤 규모의 호위함 취역
  - 2010년 프랑스로부터 헬기탑재 공격함 미스트랄 4척 구입 결정<sup>36)</sup>
  - 향후에도 러시아 해군은 국방비 가운데 25% 내외를 해군력 증강 및 운용에 배분 예정
- 최근 푸틴 대통령은 2020년까지 러시아 해군이 전함 51척, 핵잠수함 24척 체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sup>37)</sup>

### 4) 주변 국가와의 해군연합작전 확대

- 2012년 4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6척의 함정이 중국 북해함대와 연합해군훈련을 실시<sup>38)</sup>

### 마. 여타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추세

- 말레이시아는 2002년에 최초로 잠수함 2척을 계약
- 싱가포르는 잠수함 6척 체제에 더해 미국으로부터 연안전투함도 획득 추진

-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잠수함 12척 체제 구축을 목표, 러시아 및 한국과 구입 협상
- 베트남도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6척 구입 추진<sup>39)</sup>
-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년에 대규모 군비증강계획 발표
  - 향후 20년간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12척 체제로 배증할 것을 공표
- 인도도 2010년에 러시아로부터 항모 1척을 인도받기로 합의, 원자력 잠수함도 추가 도입 예정, 2014년을 목표로 국산 항모 건조 추진<sup>40)</sup>

## 4.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가능성

### 가. 동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 1) 중국 해군의 훈련 양상

- 대규모 실탄사격 및 대함미사일 발사훈련 실시

〈표 3〉 동중국해 해역에서 행한 중국 해군 최근 훈련 현황<sup>41)</sup>

일시	참가부대	훈련내용
2010.7	동해함대	절강성 연해에서 실탄 사격훈련 및 대함탄도미사일 훈련
2010.7	남해함대, 동해함대, 북해함대	남해함대 훈련에 북해 및 동해함대 합류, 합동실탄훈련
2010.8		동중국해, 실탄사격훈련
2010.9		서해해역, 실탄사격훈련
2010.11	100여 척 이상 함정, 잠수함, 해병대	동중국해 대규모 훈련
2011.6	구축함 3척, 프리게이트함 4척, 정보수집함 1척, 보급함 1척	오키나와 남서방면 450km 해상, 사격훈련
2012.4	중국 북해함대 러시아 태평양함대 6척	서해에서 연합훈련 실시

**중국 해군은 대규모 실탄사격 및 대함미사일 발사훈련과 제1도련 및 제2도련 진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였음**

**일본은 중국 해군의  
증강과 훈련 양상을  
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

- 북해, 동해, 남해 함대가 단독 혹은 합동으로 동중국해 혹은 서해 해역에서 대함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실시
  - 러시아 해군과도 연합훈련 실시
  - 대함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항모세력에 대한 소위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수행의 일환
- 제1도련 및 제2도련 진출 해상기동훈련 실시
- 북해, 동해 함대 등 각 함대 소속 함정들이 미사일구축함, 잠수함, 보급함 등으로 함대를 편성, 주로 오키나와와 미야코시마 사이의 공해를 통과, 서태평양상의 해역으로 기동, 함상 사격 훈련 실시, 같은 루트를 통해 귀항

〈표 4〉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상 기동항행훈련<sup>42)</sup>

일시	함대규모	항행기동
2008.10	구축함 4척	츠가루 해협 통과, 일본열도 선회
2008.11	구축함 4척	오키나와-미야코시마 사이 통과, 태평양 항행
2008.12	해양조사선 2척	센가쿠 해역 항행
2009.6.25	미사일 구축함 등 5척	오키나와 서남방면 170km 해상에서 북서진, 태평양 방면 기동
2010.3-4	북해함대 소속 6척	오키나와-미야코시마 사이 통과
2010.4	동해함대 구축함 2척, 프리게이트 3척, 잠수함 2척, 보급함 1척	오키나와과-미야코시마 사이 해역 통과
2010.7	구축함 1척, 프리게이트함 1척	동중국해에서 태평양 방면 항행
2011.6.8	함선 11척	오키나와-미야코시마 사이 통과, 태평양 방면 항행
2011.11.22-11.23	미사일 구축함 4척, 보급함 1척, 정보수집함 1척	오키나와-미야코시마 사이 공해 통과, 태평양 방면 항행

**2) 일본 해상자위대 대응과 훈련 양상**

- 일본은 중국 해군의 증강과 훈련 양상을 이 해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

- 2012년 5월 13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 원자바오 수상과 회담 발언 센가쿠를 포함한 해양에서 중국 활동이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음.<sup>43)</sup>
-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의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 중국 해군력 증강과 활동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서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 일본의 영토나 자원 관할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sup>44)</sup>
- 일본은 중국 해군활동 확대에 대응, 자체적으로는 ‘동적 방위력’ 증강 추진, 대외적으로는 미국, 호주 및 인도와의 연합해군훈련 확대를 통해 대응
  - 2010년 12월,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와 규슈 등지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40여 척, 항공기 250여 대, 항모 조지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함선 20여 척, 항공기 150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포레스트 라이트 (Forest Light) 연합훈련 실시<sup>45)</sup>
    - 태평양 도서 지역이 제3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기지 방어, 근접 항공지원, 해양방어 등 실시
  - 2012년 1월 말과 2월 초에 걸쳐서도 미일양국, 공동 지휘소 훈련 ‘야마사쿠라’를 실시, 가상 적군이 일본에 상륙했다는 전제하에 미일이 공동대응하여 격퇴한다는 시나리오<sup>46)</sup>
  - 2009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에 걸쳐 일본은 미국 및 인도 해군과 나가사키 및 사세보 연안을 무대로 ‘말라바 09’ 해상훈련 실시<sup>47)</sup>
  - 2012년 6월에는 일본, 미국, 호주의 3국 연합해군훈련이 일본 서남방 규슈 해상에서 실시
-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해상에서 해군력을 증강, 군사훈련과 항해기동 실시 증대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짐
  - 2010년 9월 7일, 센가쿠 제도 해상에서 중국 트롤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접촉하는 사고<sup>48)</sup>
  - 2011년 4월, 중국 항공기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90미터까지 근접 비행 사태<sup>49)</sup>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해상에서 해군력을 증강, 군사훈련과 항해기동 실시 증대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짐**

## 나. 남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 1) 중국의 입장

-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 동 해역에 수시로 순시선을 순항시키면서 역내 국가들에게 압박<sup>50)</sup>

**미국은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 입장 명시**

- 남중국해 해역이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sup>51)</sup>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항구 건설 지원, 정치적 및 군사적 원조 제공<sup>52)</sup>

**2)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

-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중국 동향에 반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응
  - 필리핀은 2009년 3월에 영해기선법을 제정, 남사군도 일부를 자국령에 포함시키는 조치 단행<sup>53)</sup>
  - 필리핀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재강화 태세
    - 2012년 1월 26일, 양국간의 외교 및 국방차관급 회의를 통해 연합훈련 회수 대폭 증대 합의
    - 2012년 4월, 양국은 남중국해 필리핀 유전 방어를 상정한 연합훈련을 실시<sup>54)</sup>

- 싱가포르도 중국 동향에 경계
  - 리완유 전 수상은 2009년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

- 베트남은 2011년 7월 15일, 다낭 해상에서 미국과 연합해군훈련 실시<sup>55)</sup>
  - 베트남은 2012년 6월 21일, 남중국해 스프라틀리(남사군도)와 파라셀(서사군도)의 영유권을 정한 해양법 가결, 이에 대해 중국측이 반발하여 스프라틀리, 파라셀 등을 산사시 행정관할에 귀속 조치<sup>56)</sup>

**3) 미국의 동남아시아 지역 문제 적극 관여**

- 미국은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 입장 명시
  - 2010년 7월 23일, 클린턴 국무장관의 동남아국가포럼 연설
    - 중국과 주변 국가들간에 전개되는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 가능
    - 영토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결부<sup>57)</sup>
  - 2010년 9월 24일, 오바마 대통령과 동남아국가 지도자들 회담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sup>58)</sup>
  - 2011년 11월 27일, 오바마 대통령,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연설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 이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sup>59)</sup>
-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간 군사훈련 강화
  - 태국과는 코브라 골드 훈련, 필리핀과는 발리카탄 훈련 정기적 실시
  - 2011년 7월 9일, 브루나이 해상에서 일본 및 오스트레일리아 해군과 연합훈련 실시<sup>60)</sup>
- 미중 간, 동남아 국가 대 중국 간 남중국해 해역 우발적 충돌 가능성 증대
  - 2009년 3월, 남중국해의 하이난섬 인근 공해상에서 미국 정보수집함 임팩터블호를 중국 선박 5척이 저지하는 사건<sup>61)</sup>
  - 2011년 3월 2일, 남중국해의 리도 암초 지역에서 자원조사를 실시하던 필리핀측 선박이 중국 함정 2척에게 정선을 명령당하는 사건<sup>62)</sup>
  - 2012년 4월 8일, 필리핀의 정찰기들이 루손 서쪽 124마일 해상에 위치한 스카브로 암초에서 중국 어선 8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퇴거를 요구, 양측 장기간 대치 사건 발생<sup>63)</sup>

## 5. 동아시아 해양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

### 가. 기본적 해양전략과 정책방향 정립

#### 1) 동아시아 해역의 각국간 잠재적 분쟁 가능성은 한국의 국가이익 추구에 불리

-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는 한국 해양수송로가 연결된 해역
  - 이 해역에서의 무력분쟁 상태는 한국의 무역, 나아가 경제안보를 위협
- 동맹국 미국, 인접 우방국가인 중국,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
  - 이들 국가간에 해양분쟁 촉발은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중대한 저해요인

**동아시아 해역의 각국간 잠재적 분쟁 가능성은 한국의 국가이익 추구에 불리**

**주변국 해양정책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해양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해양전략 책정,  
해양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부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

## 2)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해양전략 책정 필요, 해양전략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 제정 및 추진부서 설치 필요

- 중국은 2009년 6월, 해양도서(海島)보호법안 제정
  - 중국 근해에 산재한 1만 개 이상 소도서들과 그에 관련된 해양권익을 보호<sup>64)</sup>
- 일본도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 해양기본계획을 책정
  - 해양의 안전보장 확보와 원거리 도서 개발에 대한 기본방침 표명<sup>65)</sup>
  -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경단련)도 2010년에 공표한 해양입국 관련 보고서를 통해 원거리 도서에 대한 주권 확보 등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전개 촉구<sup>66)</sup>
- 주변국 해양정책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해양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해양전략 책정, 해양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부서 전반적 재검토 필요
  - 해양이익 개발과 옹호를 위한 기본전략 및 법안 책정
  - 동아시아 해양질서 안정을 위한 양자간, 다자간 해양협력 추진
  - 해양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 부서 명확화, 관련 법규 정비

## 나. 양자적 해양협력 강화

### 1) 미중 간 해양안보협력 현황

- 2011년 7월, 미국 필렌 합참의장과 중국 천빙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간 회담
  - 2011년도 소말리아 해역에서 양국 해군이 공동으로 해적대처훈련 실시 합의
  - 2012년도 재해구난 등의 인도적 목적하에 연합훈련 실시 합의 및 우발적 해상충돌에 대비한 양국간 핫라인 구축 합의<sup>67)</sup>
- 2012년 가을에 최초의 양국간 해양안보대화 개최 계획<sup>68)</sup>

### 2) 일중 간 해양안보협력 현황

- 2009년 11월 27일, 양국 국방장관 간에 합의된 방위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 함정 상호방문의 계속 실시, 해상수색구난 공동훈련 실시, 일중 방위 당국 간 해상연락 메카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실무회의 개최 등 합의<sup>69)</sup>

- 2012년 5월 16일, 양국간 제1회 고급레벨의 해양협의 개최
  - 중국측 외교부, 국방부, 국가해양국 고위 관료, 일본측 방위성, 해상 보안청 관리 참가<sup>70)</sup>

**3) 한국 주도의 양자간 해양안보협력 방향**

-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정례적인 수색 및 구조훈련 실시, 합정의 상호방문 실시<sup>71)</sup>
- 한중 양국 해군 간의 신뢰증진과 협력도 추진
  - 2011년 7월, 양국 해공군 간에 핫라인 설치 원칙적 합의
  - 2011년 11월 25일에는 한국 해군과 중국 해군 간 연합 수색구조훈련 실시<sup>72)</sup>
- 향후에도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해양협력 허브 역할 주도
  - 한일, 한중 간 해양협력은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하는 효과
  - 향후에도 한중일 3국 간 해군 지휘관 및 함정들의 상호 방문 지속 추진하여 사관학교 및 해군대학 레벨에서의 연구 및 교육 분야 협력 추진
  -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 해군사관생도나 해군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세미나, 공동연구 포럼 조직<sup>73)</sup>
  - 동아시아 인근 해양에서의 3국 간 공동의 수색구조훈련 실시도 추진

**다. 동아시아 다자적 해양협력 강화**

**1) 동아시아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상대적 부재**

- 공동안보, 협력안보 개념하에 다양한 신뢰구축 장치가 있는 유럽 지역에 비해 동아시아는 다자안보협의체가 상대적으로 미흡

**2) 90년대 이후 맹아적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대두**

- 1993년 창설된 아세안지역포럼(ARF)
-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sup>74)</sup>
- ARF회의의 일환으로 열리는 아시아 국방장관 회의나 국방대학교 총장회의
- 일본 방위성이 주최하여 매년 개최되는 동경 디펜스포럼<sup>75)</sup>

**한국 주도의 다자간  
해양협력 협의체  
창설 필요**

**가장 확실한 해양의  
안보, 해양 신뢰구축의  
방법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평화적인  
해양강국이 되어야**

- 한중일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0년 설치된 한중일 협력 사무국

### 3) 한국 주도의 다자간 해양협력 협의체 창설 필요

- 기존에 존재하는 이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최대한 활용
  -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참가하는 국가정상이나 국방부장관, 기타 국방정책 관계자들이 해양안보와 관련한 적절한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의제화
- 기존에 존재하는 미중 간, 일중 간, 양자적 해양안보협의체를 발전시켜, 한미중일이 참가하는 다자간 해양안보협의체 발족을 제의
-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남방항로 뿐 아니라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라 적극 활용될 북극해 경유 북방항로의 안전에 관한 다국적 협의체 주도

## 라. 해양자산, 해군력 강화

### 1) 가장 확실한 해양의 안보, 해양 신뢰구축의 방법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평화적인 해양강국이 되는 길

- 방어적 충분성 개념에 입각한 해군력을 기르고, 이러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각국에 대해 해양항행의 자유, 평화로운 도서 영유권 분쟁의 해결, 평화로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제창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주변국 대비 부족한 해군 관련 예산 적정 확보 필요, 국방비 전체 증액 필요
- 이지스급 구축함, 잠수함, 다목적 고속정 등 다양한 임무 수행 가능한 해군전력 증강 및 예산 배정 필요
- 국토의 원거리 도서에 해군기지 건설, 함정 배치 등을 추진하며 해양이익을 지키려 하는 주변국 동향에 비추어 우리도 상응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기획 및 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이지영(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지혜(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박영준

現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2002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2009년과 201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분과 위원장 역임. 2010년~2011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US-Japan Program 초빙연구원. 『제3의 일본』(한울, 2008),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사회평론, 2010), 『21세기 국제안보의 현안과 과제』(사회평론, 2011) 등의 저서와 편저 그 외 다수의 연구논문을 저술하였음.

주석

- 1) 구민교, 「2010년대 한국 해양정책의 과제와 전망」 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 2010년대 한국외교 10대 과제 (EAI, 2012년 3월).
- 2) 토마스 버거는 동아시아 해양분쟁 증대 요인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 Thomas U.Berger, “Navigating a Sea of Troubles: U.S. Alliances and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EAI Fellows Program Working Paper No.35 (June 2012). 본고에서는 일단 현실주의 입장을 중시.
- 3)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pp.22-23, 58.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 (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p.9.
- 4)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은 표준배수량 6,600톤으로, 대함미사일을 장착하여 미국 항모와 이지스함을 파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267.
- 5) 한급 잠수함은 중국 독자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소음이 많아 미국의 로스엔젤레스급이나 일본의 하루시오 및 오야시오급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샬급 잠수함은 배수량 6,500톤 규모로 12기의 주랑-1(JL-1)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이나 일본의 오야시오급 잠수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송급 잠수함은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킬로급 잠수함도 정숙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다. David Shambaugh, 앞의 책, pp.271-273.
- 6)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p.39.
- 7)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 (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p.11에서 재인용.

- 8)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p.61에서 재인용. 미 국방성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원해방어에 대한 중국 내의 언급은 2004년부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9) Wang Xiaoxuan, "Navy has to get stronger" *China Daily*, July 27, 2012. 저자인 왕 샤오쉬안(Wang Xiaoxuan)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연구소 소장이다.
- 10) 루양급 구축함에는 사정거리 280km의 대함미사일 YJ-62가, 루조우급에는 사정거리 150km의 SAM-SA-N-20 및 사정거리 160km의 대함미사일 YJ-83이 각각 탑재되어 있다.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 防衛研究所, 2011), p.31.
- 11)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 防衛研究所, 2011), p.30.
- 12) 『朝日新聞』 2011년 11월 6일 및 『중앙일보』 2011년 8월 5일 참조.
- 13) Edward Wong, "Chinese Military Seeks to Expand Its Naval Power: A Rapid Buildup is Seen", *The New York Times* April 24, 2010.
- 14) 김종형, 「대안적 분석모형에 의한 탈냉전 이후 동북아 재래식 전력지수 평가: 1991-2010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군사전략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p.93에서 재인용.
- 15) John W. Dower, "Occupied Japan and the American Lake, 1945-1950" Edward Friedman and Mark Selden,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9), Hal M. Friedman, *Governing the American Lake: The U.S. Defense and Administration of the Pacific, 1945-1947*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 16) Robert D. Kaplan, "Lost in the Pacific: Asia Rising"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2-26, 2007.
- 17) 이 개념은 2010년 2월에 발간된 미 국방성의 4년주기 국방태세 검토보고서(QDR)에서 표명되었다. 김재엽,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년 3월), pp.190,197.
- 18) General Norton A.Schwartz, USAF & Admiral Jonathan W.Greenert, USN, "Air-Sea Battle" *The American Interest* (February 20, 2012).(<http://www.the-american-interest.com/article.cfm?piece=1212>).
- 19) 2011년 10월 1일, 필자가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기획참모부 차장 Mr. William Wesley 씨와 하와이 사령부에서 행한 인터뷰.
- 20) 『중앙일보』 2009년 5월 14일자 기사 참조.
- 21) "Obama's Pacific power play: 'We are here to sta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8, 2011.
- 22) 『중앙일보』 2011년 12월 19일 및 『조선일보』 2011년 12월 19일 기사 참조.
- 23) 항모발진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미 제7함대 사령관 스코트 버스커크(Scott van Buskirk) 제독의 평가는 다음 기사를 참조. "U.S. developing sea-based drones to counter Chinese military advanc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17, 2011.
- 24) 2010년 12월 자위대 3만4천 명, 주일미군 1만 명이 참가하여 실시된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의 연합훈련은 1986년 이래 10회째를 맞는 훈련이었다.
- 25) 1982년부터 실시해온 코브라골드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도 참가해 왔고, 2010년부터는 한국 병력도 참가하고 있다.
- 26) 『朝日新聞』 2011년 7월 16일 참조.
- 27) Jennifer M. Lind, "Pacifism or Passing the Buck?: Testing Theories of Japanese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29, No.1 (Summer 2004), pp.92-121.
- 28) Takahashi Sugio, "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 A View from Jap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2012.7.5.).
- 29) 김종형, 앞의 논문, p.100에서 인용.
- 30) Christopher W. Hughes, *Japan's Remilitarization*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 Strategic Studies, 2009), pp.45-46. 1만 9,500톤급 헬기탑재호위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朝日新聞』 2011년 9월 16일 기사 참조.
- 31) Yoji Koda. “The Emerging Republic of Korea Navy: A Japanese Perspectiv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3, no.2 (Spring 2010). 필자 Admiral Koda 는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을 역임하였다. 코다 제독은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중국 해군의 부상에 대응하여 한미일 해군협력 강화를 요청하였고, 한국 해군의 작전 영역도 서태평양 및 남중국해 해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Yoji Koda, (VAdm JMSDF Senior Fellow, Asia Center, Harvard University), “Japanese Perspective on PRC’s rise as a Naval Power: Role of the USA, Japan and the ROK for our future” (2011년 7월 6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주최 국제세미나의 발표문.
- 32)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1917-1991』(국방군사연구소, 1997), p.440.
- 33) Captain Thomas R. Fedyszyn(Retired), “Renaissance of the Russian Navy?” U.S. Naval Institute (2012.2.29.).
- 34) Captain Thomas R. Fedyszyn(Retired), “Renaissance of the Russian Navy?” U.S. Naval Institute (2012.2.29.).
- 35) 『조선일보』 2011년 9월 9일.
- 36) 이 때문에 발틱연안 국가들은 프랑스의 대러 미스트랄 판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Doreen Carvajal, “French Deal To Sell Ships To Russians Is Criticized” *New York Times*, December, 29, 2010.
- 37) 핵잠수함 건조 전문 세브마슈 조선소(베레도르빈스크 소재)에서 행해진 핵잠수함 크나지 블라디미르 건조 기념식 연설에서. 『조선일보』 2012년 8월 1일.
- 38) 『조선일보』 2012년 4월 18일.
- 39) 『朝日新聞』 2009년 7월 31일.
- 40) 오스트레일리아 및 인도의 해군 함정 구입 계획에 관해서는 『朝日新聞』 2009년 5월 4일 및 2010년 3월 13일 참조.
- 41) 이 표의 작성에는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 2011), pp.15-16,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p.11, 『朝日新聞』 2010년 7월 3일 기사, Michael Wines, “China Stages Naval Exercises Where Tensions With Its Neighbors Have Grown” *New York Times*, November 4, 2010, 『조선일보』 2012년 4월 18일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
- 42) <표 4>의 작성에는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 2011), p.14,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p.11, 『朝雲新聞』 2009년 7월 2일 기사, 『朝日新聞』 2010년 6월 19일, 2011년 6월 9일, 6월 24일, 11월 24일 기사, 『중앙일보』 2011년 6월 11일 기사 등을 참조.
- 43) 『朝日新聞』 2012년 5월 14일.
- 44) Michishita Narushige, “The Future of Sino-Japanese Competition at Sea” (2012.3.23.).
- 45) “Japan-U.S. military drill starts...” *China Military*, Decemehr 7, 2010.
- 46) 『朝日新聞』 2012년 2월 20일 기사 참조.
- 47) 『朝雲新聞』 2009년 4월 30일 참조.
- 48) Ian Johnson, “China and Japan Bristle Over Disputed Chain of Island”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2010.
- 49) 『朝日新聞』 2011년 4월 2일 및 6월 17일 기사 참조.
- 50) 예컨대 2009년 3월 10일, 해남도의 산야기지를 출항한 중국측 순시선은 10여 일에 걸쳐 서사군도, 남사군도를 항행한 후에 산야기지로 복귀한 바 있다. 『朝日新聞』 2009년 3월 28일.
- 51) 2010년 3월, 중국을 방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제프리 베이더(Jeffrey Bader)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에 대해 중국 관리들이 이 같은 점을 거듭 역설하였다. Edward Wong, “Chinese Military Seeks to Expand Its Naval Power: A Rapid Buildup is Seen”, *The New York Times* April 24, 2010에서 재인용.

- 52) Robert D.Kaplan, “Obama Takes Asia by Sea”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10 및 『조선일보』 2011년 5월 24일 참조.
- 53) 『朝日新聞』 2009년 3월 28일.
- 54) 『朝日新聞』 2012년 1월 28일 및 4월 17일 기사 참조.
- 55) Edward Wong, 앞의 기사 및 『朝日新聞』 2011년 7월 16일.
- 56) Jane Perlez, “China chides Hanoi for claim over island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2, 2012.
- 57) 이 연설에 대해 중국측은 미국 행위가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Andrew Jacobs, “Stay Out of Island Dispute, Chinese Warn the U.S.” *The New York Times*, July 27, 2010.
- 58) Edward Wong, “China’s Disputes in Asia Buttress Influence of U.S: Beijing’s Neighbors See Need for Military Ally and Intermediary”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3, 2010.
- 59) “Obama’s Pacific power play: ‘We are here to sta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8, 2011.
- 60) 3국 연합해군훈련에 대해서는 『朝日新聞』 2011년 7월 8일 참조.
- 61) 『중앙일보』 2009년 3월 28일 참조.
- 62) 『朝日新聞』 2011년 5월 23일 기사 참조.
- 63) Floyd Whaley, “In standoff at sea, a bid for diplomac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2, 2012.
- 64) 『朝日新聞』 2011년 6월 25일.
- 65) 각의 결정, 『海洋基本計劃』 2008년 3월.
- 66) 日本經濟団体連合会, 「海洋立国への成長基盤の構築に向けた提言」(2010.4.20).
- 67) Michael Wines, “Warm words and hurdles at U.S. and China talk”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2, 2011. 천빙더 총참모장의 5월 방미에 대한 기사는 『朝日新聞』 2011년 6월 5일 참조.
- 68) 미중 간 해양안보대화 개최는 2012년 5월 4일 종료된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에서 합의 되었다. 『朝日新聞』 2012년 5월 5일 참조.
- 69)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 防衛研究所, 2011), p.28.
- 70) 『朝日新聞』 2012년 5월 17일 참조.
- 71) 최근에는 한일 양국간 수색 및 구조훈련이 2009년 7월 6일 이후, 그리고 2011년 11월 12일 이후에 각각 실시된 바 있다.
- 72) 양국간 연합 수색구조훈련 상황은 『국방일보』 2011년 11월 28일 기사 참조.
- 73) 일본 방위대학에서는 국제사관생도 학술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만 해군사관생도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회의체는 아직 없다.
- 74) 일명 상그리라 대화로 불리워지는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는 2011년부터 중국이 참가하기 시작하여, 역내의 해양안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朝日新聞』 2011년 6월 6일 및 6월 15일 기사 참조.
- 75) 2009년도에 개최된 동경디펜스포럼에서는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등 해양안보에 관련된 이슈가 다루어졌고, 논의 결과는 ARF 회의에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동경디펜스포럼에 대해서는 防衛廳, 『防衛白書2008: 平成20年版 日本の防衛』(防衛省, 2008), pp.253, 377 및 『朝雲新聞』 2009년 7월 23일 기사 참조.

참고문헌

- 구민교, 「2010년대 한국 해양정책의 과제와 전망」, 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 2010년대 한국외교 10대 과제 (EAI, 2012년 3월).
- 김재엽,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년 3월).
- 김종형, 「대안적 분석모형에 의한 탈냉전 이후 동북아 재래식 전력지수 평가: 1991-2010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군사전략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 박영준, 「21세기 일본의 해양질서 구상과 해양정책」, 『외교안보연구』 제8권 제1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6).
-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1917-1991』(국방군사연구소, 1997).
- Berger, Thomas U., “Navigating a Sea of Troubles” U.S. Alliances and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EAI Fellows Program Working Paper No.35 (June 2012).
- Carvajal, Doreen, “French Deal To Sell Ships To Russians Is Criticized” New York Times, December, 29, 2010.
- Dower, John W., “Occupied Japan and the American Lake, 1945-1950” Edward Friedman and Mark Selden,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9).
- Fedyszyn Thomas R., “Renaissance of the Russian Navy?” U.S. Naval Institute (2012.2.29.).
- Friedman, Hal M., Governing the American Lake: The U.S. Defense and Administration of the Pacific, 1945-1947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 Hughes, Christopher W., Japan’s Remilitarization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9).
- Jacobs, Andrew, “Stay Out of Island Dispute, Chinese Warn the U.S.” The New York Times, July 27, 2010.
- Johnson, Ian, “China and Japan Bristle Over Disputed Chain of Island”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2010.
- Kaplan, Robert D., “Obama Takes Asia by Sea”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10.
- Kaplan, Robert D., “Lost in the Pacific: Asia Rising”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2-26, 2007.
- Koda, Yoji, “Japanese Perspective on PRC’s rise as a Naval Power: Role of the USA, Japan and the ROK for our future” (2011년 7월 6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KRIS) 주최 국제세미나의 발표문).
- Koda. Yoji, “The Emerging Republic of Korea Navy: A Japanese Perspectiv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3, no.2 (Spring 2010).

- Li, Nan, “China’s Evolving Naval Strategy” (2010.11.19. 보스턴 대학 세미나 발표문).
- Lind, Jennifer M., “Pacifism or Passing the Buck?: Testing Theories of Japanese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29, No.1 (Summer 2004).
- Modelski, George,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Macmillan Press, 1987).
- Narushige, Michishita, “The Future of Sino-Japanese Competition at Sea” (2012.3.23.). (<http://nippon.com/en/in-depth/a00504>).
-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 Samuels, Richard J., “New Fighting Power!: Japan’s growing Maritime Capabilities and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3 (Winter 2007).
- Schwartz, General Norton A. USAF & Admiral Jonathan W. Greenert, USN, “Air-Sea Battle” *The American Interest* (February 20, 2012).
- Shambaugh, David,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Takahashi, Sugio, “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 A View from Jap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2012.7.5.).
- Whaley, Floyd, “In standoff at sea, a bid for diplomac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2, 2012.
- Wines, Michael, “Warm words and hurdles at U.S. and China talk”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2, 2011.
- Wines, Michael, “U.S. praises military talks with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 2009.
- Wines, Michael, “China Stages Naval Exercises Where Tensions With Its Neighbors Have Grown” *New York Times*, November 4, 2010.
- Wong, Edward, “China’s Disputes in Asia Buttress Influence of U.S: Beijing’s Neighbors See Need for Military Ally and Intermediary”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3, 2010.
- Wong, Edward, “Chinese Military Seeks to Expand Its Naval Power: A Rapid Buildup is Seen”, *The New York Times* April 24, 2010.
- Xiaoxuan, Wang, “Navy has to get stronger” *China Daily*, July 27, 2012.
-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 防衛研究所, 2011)
-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 防衛廳, 『防衛白書2008: 平成20年版 日本の防衛』(防衛省, 2008)
- 日本經濟団体連合会, 「海洋立国への成長基盤の構築に向けた提言」(2010.4.20.)
- 『국방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China Military, Xinhu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New York Times, 『朝雲新聞』, 『朝日新聞』 등.

THE 7<sup>th</sup>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 2012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31 May - 2 June, 2012  
Haevichi Hotel & Resort Jeju

##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난 2012년 5월 31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트렌드: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의 미래를 집중 조명하고 위기 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각국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오무르백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폴 키팅 호주 전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등 전 세계 33개국에서 탁월한 정치 지도자와 학계·경제계·문화계·여성계·IT 업계를 대표하는 스티브 워즈니악 등 3,000여 명이 참석하여 제주포럼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2001년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수많은 난관과 과제를 극복하고 연례화의 토대를 구축한 **오늘의 제주포럼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공로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전환기로서 성장단계에 있는 제주포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의적절한 의제선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과감한 변신을 시도해 나가 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당면한 재정 위기가 단순히 유럽의 위기로만 치부될 수 없을 만큼 글로벌 환경이 시시각각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말에 개최되는 제8회 제주포럼에는 이러한 세계사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의제를 준비해 나가 고자 합니다. **2013년 제8회 제주포럼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시: 2012년 5월 31일(목) ~ 6월 2일(토)

장소: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주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주최: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연구소  중앙일보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한국정보통신연구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KB국민은행  Global Growth Institute  동아시아연구소  KISSIST  한국국제협력단

 KOICA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용연구원  KIEPE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제주연구원  JDI  CHINA  동광경제연구원  연영BUSINESS  KOREA KF FOUNDATION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T. +82 (0)64 735 6531 | F. +82 (0)64 738 6539 | E-mail. jejuforum@jpi.or.kr  
[www.jejuforum.or.kr](http://www.jejuforum.or.kr)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